

2015년 사회복지직 시험

1.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국제연합 창설
-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
- ㄷ. 다극체제
- ㄹ. 국제연맹 창설

- ① ㄴ - ㄱ - ㄹ - ㄷ
- ② ㄴ - ㄹ - ㄱ - ㄷ
- ③ ㄹ - ㄷ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②

[출제단원] VI.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ㄱ. 국제연합 창설(1945년) :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 평화 달성을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였으나,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ㄴ. 제국주의에 기초한 유럽열강의 식민지 확보 경쟁(19C 후반) :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원료와 상품 시장의 필요로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진출하였고, 유럽의 근대 국제사회가 확산되어 전 지구적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ㄷ. 다극체제(1970년대)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유럽 공동체, 중국, 제3세계(비동맹국가)가 급부상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ㄹ. 국제연맹 창설(1920년) : 유럽의 제국주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였고, 이 후 국제 평화 달성을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2. ㉠, ㉡의 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1세기 국제체제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 중 초국가적 행위자에는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간 기구가 있다.

㉠

㉡

- ① 세계무역기구(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② 국제사면위원회(AI) 유럽연합(EU)
- ③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④ 국제통화기금(IMF) 국경 없는 의사회(MSF)

[정답] ④

[출제단원] VI.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① (X)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지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지역적 기구'이나, 회원 자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자유 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북미 지역 경제 협력 기구를 의미합니다.

② (X) 국제사면위원회(AI)는 '비정부 간 기구', 유럽연합(EU)은 지

리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지역적 기구'이나, 회원 자격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합니다.

③ (X)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합니다.

④ (O) 옳은 분류에 해당합니다.

3.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②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나타난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정답] ①

[출제단원]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치문화

정치문화는 전근대적인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향리형',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민형', 선진 민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참여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향리형 혹은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하다.(O)

⇒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각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② 향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할 수 있다.(X)

⇒ '향리형' 정치문화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③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문화가 나타난다.(X)

⇒ '신민형' 정치문화에서는 위로부터의 강제나 명령에 의한 정책의 결정 및 실시(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나, 아래로부터의 정책 형성 과정(투입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④ 참여형 정치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X)

⇒ '참여형' 정치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4.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어느 선거구의 기초의원선거 개표 결과이다. 이 표에 나타난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인 수	투표수	결과	당선	당선	3등	4등	5등
		후보자	송OO	김OO	김OO	나OO	박OO
39,889	22,375	득표수	6,451	5,383	4,810	3,099	1,348
		득표율(%)	28.83	24.06	21.50	13.85	6.02

* 6등 이하는 생략함

-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 ② 국회의원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 ③ 광역의원선거보다 사표(死票)가 줄어든다.
- ④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제도

'선거구제'와 '대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의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1구 1인제'로, 투표 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는 다수 대표제와 결부된다.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제	다수 대표제	최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시키는 제도이며, 다수 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소수 대표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게 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소수당에서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선거 제도이다.
	비례 대표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며,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직능 대표제	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①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이다.(X)
⇒ 정당에 대한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 ② 국회의원선거도 동일한 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X)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③ 광역의원선거보다 사표(死票)가 줄어든다.(O)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이 당선되므로,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와 비교할 때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 ④ 절대다수 대표제와 연결된 선거구제이다.(X)
⇒ '절대다수 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 대표제'의 한 유형입니다.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연결되므로, 제시된 '중선거구제'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5.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③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인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I.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유형

'심의민주주의'란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 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O)
⇒ '심의민주주의'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X)
⇒ '심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입니다.
- ③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인 중요하다고 본다.(O)
⇒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 ④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O)
⇒ '심의민주주의'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③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④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②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답 없음**

[출제단원]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①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O)
⇒ '선거 공영제'란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 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2015년 6월 공직선거법개정 O)

⇒ 헌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속이 '국회'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개정 후 공직선거법 (2015년 6월 19일 개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O)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하여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1인 2표제라고 표현합니다.

④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O)

⇒ '보통 선거'란 '제한 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적, 연령, 거주지 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2015년 7월 24일 개정된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 반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등을 받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법,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므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 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
- ③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
-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

[정답] ④

[출제단원] III.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O)
⇒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지만, 특별 사면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갖지 않는다.(O)

⇒ '사면'이란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다만, 사면권 행사를 통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	필요	필요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필요	불요

③ 국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제도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다.(O)

⇒ 국회의 '위원회'란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의원들이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같은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즉,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 20인이 되지 못하여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하나의 교섭단체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로 집회되지 않지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는 집회된다.(X)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됩니다. 반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합니다(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8.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이자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답] ③

[출제단원] IV.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그 피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업자가 그 손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무과실 책임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와 관련하여 현대 민법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해소송, 제조물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X)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②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X)
 ⇒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③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O)
 ⇒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④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X)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시는 길거리와 공원, 광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 주민인 갑은 흡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혐연자로서 ○○시의 조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 보기 >

-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 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 ㄷ. 갑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④

[출제단원] III.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

ㄱ. 갑과 을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O)
 ⇒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인하여 '갑'은 자신의 권리(=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을'은 자신의 권리(=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에서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기본권의 충돌	두 명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결의 원칙	규범 조화의 원칙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 원칙이다.
	법의 형량의 원칙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원칙이다.

ㄴ. 갑의 흡연권과 을의 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O)
 ⇒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즉,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기본권 충돌과 관련하여 '흡연권은 사생

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법익 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혐연권'을 우선시 한 바 있습니다.

ㄷ. 같은 흡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O)
 ⇨ '조례'제정행위도 공권력작용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인하여 자신의 '흡연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 ②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④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출제단원] V.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 ①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X)
 ⇨ 범죄와 형벌은 원칙적으로 문서화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②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O)
 ⇨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O)
 ⇨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금지되는 행위 또는 형벌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④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O)
 ⇨ 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임의로 해석하여 유추 적용 하는 것은 금지 됩니다(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1.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사회 탐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정확한 관찰과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객관적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 ②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 ③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법칙 도출에 한계가 있다.
- ④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I.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제시문에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과 사회 현상 탐구의 초점이 '현상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 ②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③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수치화 된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④ (O)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와 의도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사회화 기관의 유형별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구 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또래 집단	㉡가족
2차적 사회화 기관	㉢직업 훈련원	㉣학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출제단원] II.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기관

㉠ (O) 또래 집단은 기초적인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일상 생활을 통해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 (X)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긴 하지만,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 (X) 직업 훈련원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 (O)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니다. 참고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무조건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13.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 + B → A, B	A : 기존 문화 B : 새로 유입된 문화
(나) A + B → B	C : 새롭게 형성된 문화 + : 접촉
(다) A + B → C	-> : 변화

- ① 문화 접변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 ② (가)는 문화 융합으로서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나)는 문화 동화로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④ (다)의 사례로는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답] ㉔
[출제단원]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

(가)는 문화 병존(공존), (나)는 문화 동화, (다)는 문화 융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① (O)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은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는 문화 접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 ② (X) 문화 융합은 새로 유입된 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문화와 융합시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새로 유입된 문화를 거부하면 문화 병존이 나타나거나 아예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O)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약한 상황에서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 기존 문화가 소멸하고 유입된 문화로 대체되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 ④ (O) 멕시코 토착 인디언의 전통 문화와 에스파냐의 문화가 만나서 독특한 메스티조 문화가 형성된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제3의 문화 요소를 만든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14. 사회학적 개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A)라고 한다.

- ㄱ. 미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 ㄴ.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다.
- ㄷ.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ㄹ. 개인의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㉔
[출제단원]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구조

- 제시문은 사회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 ㄱ. (X) 사회 구조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합니다.
 - ㄴ. (X) 사회 구조는 개인의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없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 ㄷ. (O) 사회 구조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사회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 ㄹ. (O)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조화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데 이를 사회 구조의 '강제성'이라고 합니다.

15. ㉑, 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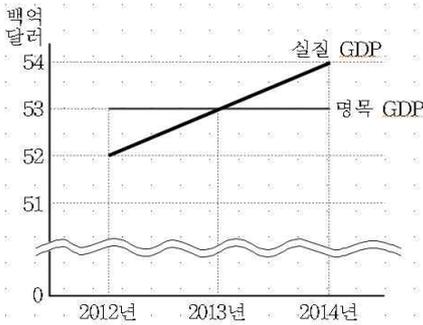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남미 아마존 강 유역에서 원시적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방식도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 못지않게 합리성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㉑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고,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하우스(Hausa)족에게는 ㉒ 출산 후 적어도 2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도록 남녀의 관계를 금하는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 ㉓ 서구인들 대다수가 야만적이고 무지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단백질 결핍증인 과시오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 ① ㉑과 같은 시각은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② ㉒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③ ㉒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 ④ ㉓과 같은 태도는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답] ㉓
[출제단원] III. 문화사 사회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 ① (X) ㉑은 문화를 이해하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면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 ② (X)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물질문화입니다. 그러나 '관습'은 제도문화로서 비물질문화로 분류됩니다.
- ③ (O) 관습은 규범의 일종입니다. 규범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준수해야 할 행위양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 ④ (X) 자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㉓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입니다.

16. 그림은 어느 나라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화폐가치와 물가수준의 GDP 디플레이터로 추론한다.)



- ① 2012년 이후 이 나라의 화폐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 ② 2013년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같다.
- ③ 2013년의 물가수준은 2014년의 물가수준보다 높다.
- ④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정답] ③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질 GDP와 명목 GDP

물가 지수란 추상적인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하여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text{GDP 디플레이터} = (\text{명목 GDP} / \text{실질 GDP}) \times 100$$

- ① (X) 제시된 그래프에서 2013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12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고 2014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으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의 화폐가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가지고 500원인 어떤 상품을 2개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하락하여 해당 상품의 가격이 100원으로 되었다면 1,000원을 가지고 해당 상품을 10개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1,000원의 가치는 증가한 것입니다.)
- ② (X)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과 동일합니다. 2013년의 경제성장률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에서 B로 변화할 때 증가율은 $\{(B-A) / A\} \times 100$ 으로 도출합니다.)

2013년 경제성장률	$\frac{53 - 52}{52} \times 100 = \frac{100}{52}$
2014년 경제성장률	$\frac{54 - 53}{53} \times 100 = \frac{100}{53}$

따라서 2013년의 경제성장률과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같지 않습니다.

- ③ (O) ①의 해설에서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2012년 이후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2013년의 물가수준이 2014년의 물가수준보다 높습니다.
- ④ (X)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인구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2013년의 1인당 실질 GDP가 2012년의 1인당 실질 GDP보다 큰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닭고기 가격 상승 → 닭고기 (㉠) 감소 → 돼지고기(㉡) 증가 → 돼지고기 가격 (㉢)

- | | ㉠ | ㉡ | ㉢ |
|---|-----|-----|----|
| ① | 수요 | 수요량 | 하락 |
| ② | 수요량 | 수요 | 하락 |
| ③ | 수요 | 수요량 | 상승 |
| ④ | 수요량 | 수요 | 상승 |

[정답] ④

[출제단원]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재화의 특성 (대체재와 보완재)

- ㉠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닭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 ㉡ 대체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A, B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닭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 ㉢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고기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변화된 균형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18. 밑줄 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불황에 빠졌으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double-dip)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펴왔다.

- ① 이는 재할인을 인화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 ②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대규모 국채 매입은 이 정책에 포함된다.
- ③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 ④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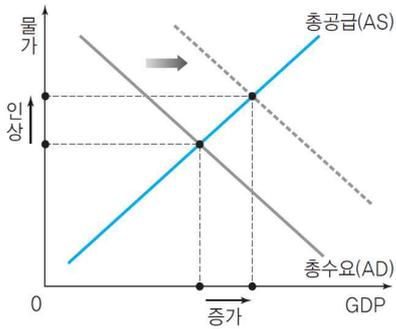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 정책의 하나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입니다. 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여 정부 지출을 더 늘리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 됩니다.

- ① (O)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을 인하는 양적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 정책에 해당합니다. 재할인을 인하면 파급되는 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이자율 수준이 하락하며 이로 인해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GDP)이 증가합니다.

1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



- ② (O) 대규모의 국제 매입 또한 양적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 정책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즉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증가시키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GDP)이 증가합니다.
- ③ (X)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여 (실질) 이자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여야 투자가 증가와 이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게 됩니다.
- ④ (O)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만약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통화량이 증가하였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1달러 주고 살 수 있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해당 상품을 2달러에 사야한다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이 1개에서 0.5개로 변화한 것이므로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 다음 글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이 너무 (㉠)고 판단하여 (㉡)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가격이 유효(binding)하다면 시장에서 (㉢)이 발생한다.

	㉠	㉡	㉢
①	낮다	공급자	초과공급
②	높다	공급자	초과수요
③	낮다	소비자	초과수요
④	높다	소비자	초과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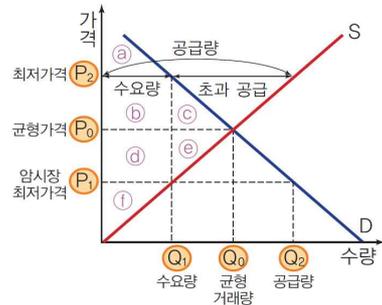
[정답] ①

[출제단원] III.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가격 하한제)

'가격하한제'는 시장 가격이 규제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최저가격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격하한제를 실시할 경우 규제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며 규제 가격(하한 가격)이 유효하다면 규제 가격 수준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격하한제는 공급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며, 이 제도가 실시될 때 하한가격이 유효하다면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20. 환율변동의 요인, 환율변동의 방향, 환율변동의 영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면, 아래에 기술된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국내금리인상 -> 환율상승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 ② 국내금리인상 -> 환율하락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 ③ 국내물가상승 -> 환율상승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 ④ 국내물가상승 -> 환율하락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정답] ②

[출제단원] V.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효과

- ① (X)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원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우리 금융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하락합니다. (국내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가격이 1달러인데 환율이 1,000원/달러라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은 1,000원이지만, 환율이 상승하여 2,000원/달러가 된다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하락합니다. 채산성이란 기업 경영상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환율 상승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하락)
- ② (O) ①의 설명에 따라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국내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년 1달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환율이 2,000원/달러일 때 매년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여 1,000원/달러가 된다면 매년 1,000원의 이자만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환율 하락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감소)
- ③ (X)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외국 상품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이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유입이 감소하므로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상승합니다. (국내 물가 상승 -> 환율 상승)
-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년 1달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환율이 1,000 원/달러일 때 매년 1,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2,000원/달러가 된다면 매년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환율 상승 -> 달러화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④ (X) ③의 설명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국내 물가 상승 -> 환율 상승)**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가격이 1달러인데 환율이 2,000원/달러라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은 2,000원이지만, 환율이 하락하여 1,000원/달러가 된다면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상승합니다. **(환율 하락 -> 원자재 수입기업의 채산성 상승)**